

# 가상자산사업자 은행 실명계좌와 트래블룰

2022. 1. 12.

CHA & KWON

차·권 법률사무소

## 강연자 소개



### 권오훈 변호사

- 차안권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 서울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원
- 과기정통부/NIPA 블록체인 규제개선 자문위원
-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위원

[ohkwon@chakwon.com](mailto:ohkwon@chakwon.com)

02-3495-0957

## 1부. 가상자산사업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문제점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요건

-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
  - ✓ ISMS 인증 획득
  - ✓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 단,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경우 예외
  - ✓ 금융 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가 대표자 및 임원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요건

**특금법 제7조(신고)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동일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한정한다)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한다]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요건

- 실명확인 가능 입출금 계정
  - ✓ 동일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
  - ✓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에 한정
    - 상당수 거래소는 고객이 맡긴 금전을 하나의 계좌에서 혼합 관리
    - 은행으로 하여금 고객별 가상계좌에 대해 실명확인을 받고, 개별고객 계좌와 거래소 계좌를 분별 관리하도록 하여 투자자 보호를 기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

## 은행의 추가적인 의무

-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

- ✓ 기본 확인 사항

- 고객확인(Customer Due Diligence, CDD)
    - 고액현금거래보고(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
    - 의심거래보고(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

## 은행의 추가적인 의무

-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

- ✓ 추가 확인 사항

-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변경신고, 수리, 직권말소 사항
    -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 관리하는지 여부
    - ISMS 인증 획득 여부

→ 변경신고 및 직권말소 사항 사유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

재함



##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시 요건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 18)
    1.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 관리
    2. ISMS 인증 획득
    3. 고객별로 거래내역 분리 관리
    4. 가상자산사업자의 절차 및 업무지침을 확인

→ 은행이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AML CTF 위험 식별, 분석 평가
  - 4를 조건으로 해야만, 사업자는 신고 수리 이후 금융거래 등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미리 개시 가능
- 그런데, 4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은행이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음

# 은행연합회 자금세탁 위험평가

- 은행연합회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 위험평가방안

✓ 필수요건

구분	목적	점검항목
법적요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고객확인 이행 (법 §5-2③) 및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시 요건(영 §10-18) 점검	ISMS 인증 획득 여부
		금융관련법률 위반 이력
		예치금·고유재산 및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여부
		다크코인 취급 여부
		FIU 신고 유효 여부
기타요건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행위, 외부해킹 등으로 인해 사업연속성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점검	부도, 회생, 영업정지 이력
		대표자 및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
		외부해킹 발생이력
		신용등급
		당기순손실 지속 여부

## 자금세탁 위험평가의 주체

- 은행연합회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 위험평가방안
  - ✓ 고유위험
    - 취급 가상자산 신용도, 취급하는 가상자산 수, 고위험 코인 거래량 등 **상장 관련**
  - ✓ 통제위험 (설계)
    - **AML 규정, 보고책임조직 구성 등**
  - ✓ 통제위험 (운영)
    - 임직원 교육, **요주의리스트** 필터링 등

## 자금세탁 위험평가의 주체

- 가상자산사업자 현장 컨설팅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1. 8. 17.) 중 발췌

- 개요

금융위는 신고 준비중인 25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실시('21.6.15.~7.16.)

- 컨설팅 목적

현장컨설팅 사항 중 거래체계 안정성, 고객피해 방지제도 운영 등은 신고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거래참여자 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 필요점은 향후 제도화 국회 논의 등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

## 자금세탁 위험평가의 주체

- 가상자산사업자 현장 컨설팅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1. 8. 17.) 중 발췌

- 현장컨설팅 결과

기본적인 전산시스템은 구축중이나, 가상자산 거래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수준 등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 (내규, 데이터관리정책, 서비스 관리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증권시장과 비교할 경우 증권시장에서 거래소, 예탁원, 시장감시, 증권사 등으로 분화되어 있는 기능을 단독으로 수행함으로써, 시장질서의 공정성, 고객자산의 안전성, 시스템 안정성 등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 자산거래시장으로서 문제점이 노출

# 자금세탁 위험평가의 주체

- 위험평가의 주체

- ✓ 금융위는 7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은행은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에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자금 세탁위험 평가를 실시, 실명계좌 개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 ✓ 그런데 금융위가 현장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사실상 정부가 자체 기준으로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위험평가를 실시한 것은 아닌지 의문
- ✓ 특금법에 따라, 위험평가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은행이 되어야 함
- ✓ 금융위는 현장 컨설팅 결과의 기준이 된 가이드라인을 공개해야 함

## 은행의 의무

-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등이 가상자산사업자를 고객으로 할 경우
  - ✓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이후 변경 사유가 있는지
  -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이후 직권 말소 사유가 있는지
  - ✓ 실명확인입출금계정 개시 시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AML CTF 위험 지속적 식별, 분석 평가

→ 추가적인 AML 의무가 존재하는 반면, 의무의 내용 불명확

\* 나아가 가상자산사업자도 금융기관등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사업자를 고객으로 할 경우 은행과 마찬가지로의 AML 의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

##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요건
  - ✓ ISMS /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등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이후 금융거래 의무
  - ✓ CDD, STR, CTR 등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이후 특유 의무
  - ✓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 관리, 오더북 공유 금지, 다크코인 취급 금지 등

→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금융거래 요건은 물론, 특유의 요건이 존재

→ 가상자산사업자의 법 위반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으로 두어야 함

→ 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AML 활동 전반에 추가적인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가혹



## 특금법 개정 방향성

- 실명계좌 요건 변경
    - ✓ 실명계좌를 신고 불수리 요건에서 삭제
    - ✓ 신고 수리 후 금융거래 요건으로 변경
- 신고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부터 해방

## 특금법 개정 방향성

- 실명계좌 발급 거부 최소화

- ✓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 거부 시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교부

- 가상자산사업자의 절차 예측 가능성 향상

-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일 경우의 의무 완화

- ✓ 가상자산사업자 자체의 의무 명확화

- ✓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일 경우에도 다른 금융회사등에 준하여 AML 의무 부여

- 현행 특금법 상 모호성 제거

## 2부. 현행 트래블룰의 문제점

## 트래블룰의 법적 근거

### Updated 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to Virtual Assets an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FATF, 2021. 10. 28. 개정안

- Wire transfers and the 'travel rule'
  - ✓ 175. ~ 204.

## 트래블룰의 법적 근거

### FATF Recommendation 16 전신송금시의 정보 제공 (트래블룰) 적용 범위

- ✓ 전통적인 금전 송금
- ✓ VASP 사이의 가상자산 거래
- ✓ VASP와 개인지갑 사이의 거래
  - A. B. 에는 트래블룰이 전부 적용됨
  - C의 경우에는 일부만 적용됨
  - 개인지갑은 VASP가 아님

### VASP와 개인지갑 사이의 거래

- FATF는 가상자산을 송금하는 VASP가 개인 지갑으로 정보를 보낼 것을 예측하지 않음
- 위와 같은 경우 VASP는 고객으로부터 송금인 또는 수령인 정보를 취득하여야 함
- 각 국은 위와 같은 의무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트래블룰의 법적 근거

**특금법 제6조(적용범위 등) ①** 이 장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등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③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제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정보제공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금법 제5조의3(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①** 금융회사등은 송금인이 전신송금(電信送金: 송금인의 계좌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금융회사등을 이용하여 국내외의 다른 금융회사등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5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송금받는 금융회사등(이하 “수취 금융회사”라 한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100만원)

## 트래블룰의 법적 근거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10(가상자산이전 시 정보제공)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그 정보 제공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제공할 것

가.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가상자산을 받는 고객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말한다)

나.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가상자산을 받는 고객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해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10(가상자산이전 시 정보제공)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그 정보 제공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또는 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만 해당한다)를 제공할 것

4. 제2호에 따른 정보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함께 제공하고, 제3호에 따른 정보는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공할 것

## 트래블룰의 법적 근거

- 정부는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의무(법 제6조제3항 및 안 제10조의10)의 경우, 검사·감독을 '22.3.25일부터 시행(법 시행일로부터 1년 유예) 할 것으로 발표함
- 가상자산사업자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업계 자율적으로 공동의 솔루션을 도입할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
- 나아가 필요시 현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논의중인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기준(Travel rule)'의 세부사항을 반영할 계획



## 현행 트래블룰의 적용 방법

- 거래소를 중심으로 자체적인 트래블룰 솔루션 개발이 진행
- 업비트는 자회사가 개발한 varifyVASP 솔루션 도입
- 빗썸, 코인원, 코빗은 지난해 12월경 세 거래소의 합작법인이 개발한 Code 솔루션의 테스트를 완료, 1월 중으로 본격적으로 이를 거래소에 도입할 예정
- 코인원은 1월 24일부터 KYC를 거친 지갑 주소를 사전에 등록하고, 등록되지 않은 주소로의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하는 화이트 리스트 제도를 도입
- 본인 지갑에 해당하더라도, 메타마스크나 하드웨어 지갑과 같이 KYC를 진행하지 않고 계정을 생성할 수 있는 지갑으로의 출금은 제한

## 현행 트래블룰의 적용 방법

- 해외로 이동이 어려울 경우 국내 거래소에서만 가상자산이 공전할 것으로 보임
  - ✓ 김치 프리미엄 논란 재발 가능
  - ✓ 가두리 펌핑 등 불공정행위 우려
- 사전 등록하지 않은 지갑으로 출금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이례적

## 해외 트래블룰 규제 사례

### - VASP와 개인지갑 사이의 거래

#### ✓ 싱가포르

- 트래블룰 적용 대상이 아님
- 단, 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EDD 절차를 거쳐야 함
- 본인 지갑일 경우, 사토시 테스트 등을 통하여 확인
- 제3자 지갑일 경우, 제3자의 신원을 확인

#### ✓ 영국

- VASP가 송금인인 경우 정보를 보낼 의무는 없음
- 단, 수령인에 관한 정보는 수집하여야 함

## 트래블룰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 FATF의 규정에 규정된 필요최소한의 한도에 맞추도록 하여야 함
  - ✓ 해외의 best practice 를 벤치마크 하여야 함
- 거래소가 아닌 다른 가상자산사업자도 트래블룰의 예외가 없으므로 (지갑 서비스 업자 등)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
- 블록체인 스타트업들도 재정적/기술적 부담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감사합니다.

CHA & KWON

차·권 법률사무소

※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법률적인 자문이나 홍보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차앤권법률사무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이 자료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사무소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